

주요 현안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가족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양현제 국회에는 가족의 정의 확대, “건강가정” 용어를 가지중립적인 용어인 “가족”으로 변경,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임.

- 개정 법률안은 혼인과 혈연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우리 법과 제도는 1인가구, 노인가구, 동거가족 등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가족을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데 따른 것임.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1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bbsSn=707723

저출산 대응 위해 지자체 맞춤형 출산·보육 정책 지원

☑ 행정안전부는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추진한다고 밝힘.

- 상반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5개 지자체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11개 지자체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 총 16개 지자체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임.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04.13.]
https://www.mois.go.kr/fnrt/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lId=83954

인공지능(AI) 분야 양성평등 정책 확산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인공지능(AI) 분야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인공지능(AI) 기술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 특성상별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AI) 챗봇(이루다)의 성별 고정관념 학습, 성차별 및 장애인 차별과 혐오 표현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름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부작용 해소에 초점을 두고 진행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13.]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bbsSn=7077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

-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3,219명) 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3,859명) 대비 6.1% 감소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15.]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bbsSn=707729

청년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위한 정책과제 모색

☑ 여성가족부는 ‘과학의 날’을 맞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족한 과학기술인력 공급 문제와 성별인증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여성의 과학기술 분야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에서는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교육부 통계)과 여성과학기술인 온라인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의 운영 현황에 대한 발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분야 여성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bbsSn=707736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2021년 4월 20일(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 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사법·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0.]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bbsSn=707737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수립 1년 계기,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여성가족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계기로 2020년 4월 23일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1년을 맞이해 그간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최근 디지털 성범죄 양상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함.

-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2의 엔(n)번방’으로 불리는 유사 범죄의 발생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향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1.04.2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bbsSn=707743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

☑ 통계청은 신혼부부의 출산·경제활동·주택 소유 현황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출산 변화와 경제활동·주택 소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참고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2021.04.25.]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9268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돌봄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2021-04-19	아이돌봄비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봄비의 역할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2021-04-19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제26조의2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21-04-21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려 함(안 제34조 제4항 및 제7항)

젠더·폭력·안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우의원 등 10인)	2021-04-14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신고현장에서 취한 응급조치 등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 형사상 책임 면제(안 제13조의2)
	실종아동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2021-04-16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실종아동 관련 정책이 수립·시행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	2021-04-16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 (안 제1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	2021-04-19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하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2021-04-21	학대피해아동심터를 지역별 아동의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로서 별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심터의 업무 내용과 서비스 지원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2호 신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2021-04-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등으로써 가정폭력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및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8조의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1-04-23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언론 속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kwdi.re.kr/plaza/press.do>

성인식자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4.20	서울경제	이대생 외면한 성평등 정책, 2030 성장동력 키워	NewsView/221500QGVG
2021년 여성연구 발표회	4.25	연합뉴스	"여성 고위공무원 사표비용 납성의 4배...유리천장위 '유리장벽'"	https://www.yyna.co.kr/view/AKR2021042119600530?input=1195m
		여성신문	여성 고위직 임기 전 퇴직 남성의 4배...유리장벽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dno=210809
		디지털타임스	아직 견고한 유리천장... 여성 고위공무원 사표 '납성의 4배'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21042602101758063001&ref=naver
출신과 양육을 경험한 여군의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질적 연구	4.25	서울신문	육아휴직 탄력권도 있어야... '오지 군부대' 여군에겐 그림의 떡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26010002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4.22	KBS	실직에 양육까지 이중부담... "돌봄 정책 마련이"	정성미 부연구위원	http://news.kbs.co.kr/news/view.do?mcid=5169223&ref=A
4.23	이데일리	공공기관 일선 5명중 1명은 여성이지만... 성임은 60억 5.3%증	문유경 연구원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44066290190728&mediaCodeNo=2578&OutLinkClick=Y
		공공기관 급여 뽐은 7291만원, 女는 5859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290190728&mediaCodeNo=2578&OutLinkClick=Y

유관기관 연구동향

10대 청소년 미혼모 고립 해소: 가정방문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미혼모는 자녀의 양육육자 동시에 다른 이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장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가정 내 폭력과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가 적지 않아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해 자립을 도울 방안을 모색

참고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2021.04.15.]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4353>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과 제언: 서울시 사례를 통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청년정책 전달체계 필요성에 대한 정당성 확보, 청년정책 콘텐츠 내실화와 전달의 전문성, 통합성 및 책임성 강화,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정비 등이 요구됨. 본 연구는 서울시 사례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안함.

참고자료

- [보건복지 Issue&Focus, 2021.04.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bbsSn=707743